올 방한관광객 2000만명 유치 실패 전망

민주 김윤덕 의원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적은 '낙제점' 수준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인 김건희 앞세웠으나 오히려 '마이너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2024년 방한관광객 2,000만명 유치는 사실상 실패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방한 외래관광객은 총 910만명으로 집계되며, 관광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1,69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추산했다. 이마저도 한국관광공사의 낙관적인 예측이며, 코로나 시기 이전 2019년의 외래관광객 수치(1,750만명)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의원은 "2024년의 관광 분야 예산은 1조3,115억원으로 2023년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라며, "이는 긴축재정 기조 하의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인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관광객 유치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를 명예위원장으로 내세운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성적표 또한 처참하다. 김윤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한국방문의 해는 크든 작든 꾸준히 외래관광객 증가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23·24년 김건희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된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실적은 오히려 외래관광객이 감소된 마이너스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모든 역량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추진단이 과연 한국 관광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에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추진단의 예산 집행 내역, 실적 등을 꼼꼼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관광 격차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방한 외래관광객 중 95.75%(중복응답)는 수도권에 방문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41.75%(중복응답)의 방문율을 나타냈다. 여기서 제주, 부산 등의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은 1%대의 방문율에 그쳤다.

김윤덕 의원은 "수도권과 제주, 부산 등의 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각 지방별 외래관광객 방문율 1%대 수준"이라며,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매년 꾸준히 투입되지만, 수도권 관광 편중 현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15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만호 기자

한국문학 세계화 '박차'

민주 김윤덕 의원,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법안 발의
한국문학번역원,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지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12일,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목표로 한 '문학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한강 작가가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에도 번역원은 한강 작가를 지원하고,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강 작가가 세계 독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그의 명성 구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학의 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문학번역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 2의 한강작가를 발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소식지 제88호 발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14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가을호(제88호)'를 발간했다.

가을호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제412회와 제413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첫 회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전북의 도약과 도민 행복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문승우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다양한 특례를 통해 자치 입법을 마련하고, 전북의 장점을 법제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면서, "전북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한층 더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가을호에는 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피해복구 활동과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활동, 상임위원회별 의정발전 자문위원 위촉 등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김정기(더불어민주당·부안) 위원장은 "이번 소식지는 7월부터 9월까지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과 가을 분위기를 오롯이 담아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지 구독 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www.jbstatecouncil.jeonbuk.kr) 또는 전화(063-280-3044)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공수처는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오동운(앞줄 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뉴시스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전북환경청 등 대상 현장 국감
"수해민은 법정 다툼 중인데 환경부는 다 잊고 새출발이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은 14일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통적인 환경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지루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바 재판부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윤수봉 도의원, 국회 환노위 김제 용지 현장방문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이 국회 환노위 김제 용지 현장방문에 참석, 축사 매입을 통한 수질개선(만경강·용암천), 악취저감(전주·완주 혁신도시)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은 14일 김제 용지 신암마을 복지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김제용지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악취저감지원사업 국가예산 건의와 생태복원 추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제 용지 현장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이학영·김주영·김형동·박정 환경노동위원이 방문했으며, 권요안 도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병관 행정부지사,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현장 애로사항 청취

김동구 도의원, 군산 세아씨앤에스서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군산 세아씨앤에스에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선정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자치도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현숙 군산시 산업혁신과장, 김정국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 그룹장, 세아씨앤에스 등 군산시 지원기업 대표 9명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사업은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도내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준별 스마트 공장 구축 및 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210개(연간 70개) 기업을 선정해 총 2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김동구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요인"이라고 말하며,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 노하우를 도내 기업들이 활용하고, 참여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물적지원 외에도 삼성전자 멘토로부터 인력양성, 기술 및 판로지원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정과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사업 참여 소감을 밝혔다.

사업을 주관하는 전북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군산지역 9개 기업이 최대 원가절감 14%, 일부 공정 과정 70% 단축, 불량률 90% 개선 등의 혁신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수협 日 오염수 대책위, 올해 단 한차례도 안열려"

민주 윤준병 의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수협중앙회를 필두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된 가운데, 올해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산어업인을 대변하기 위한 수협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작년 5월 17일 수협을 중심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당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권역별로 서해대책위원회(경인·충청), 서남해대책위원회(전북·전남), 남해대책위원회(경남·부산), 동해대책위원회(경북·강원), 제주대책위원회(제주) 등 5개 권역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같은 날 1차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작년 8월 24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와 관련

된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 대책위원회를 가졌다.

그러나,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 및 이에 대한 2차 대책위원회가 열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9차에 걸쳐 총 7만톤에 가까운 핵오염수(12조 베크렐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었던 만큼 수협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협은 대책위 개최 및 활동을 위하여 별도 편성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진행했던 대책위원회 1차·2차 회의 역시 별도 예산이 아닌, 해상풍력·바다모래·원전 대응 등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포괄적인 대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바다환경보전 현장대응예산(4,500만원)'을 활용해 행사물품을 구입하거나 자료제본 등에 총 247만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민연금 체납 줄었으나 20대 체납은 늘어

민주 박희승 의원

국민연금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 체납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수는 21.0%(141만3,842 → 111만7,338명), 체납액은 19.9%(4조3,060억원 → 3조4,506억원)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8%(7만5,538명 → 8만1,447명), 체납액은 7%(1,272억원 → 1,365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도 체납자수, 체납액이 각각 199%(6,075명 → 1만2,104명), 254%(103억원 → 262억원)가 증가했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는 50대 43만727명(38.5%), 40대 38만 186명(34.0%), 30대 21만 2,874명(19.1%), 20대 8만1,447명(7.3%) 순으로, 20대 체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9세 이하, 60대 이상 체납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0대 이하, 60대 이상이 각각 8.0%, 1.3%로 2019년 5.3%, 0.4%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하고 있다. 즉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 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